자금세탁죄의 개정방향 :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과 관련하여

김 용 욱*

국 | 문 | 요 | 약

세계화된 국제환경 속에 서식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의 본질은 '조직' 이 아니라 '자금' 이다. 그들을 근원적으로 해체 내지 고사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자금을 색출하고 박탈하는 것이다. 그들은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증거를 인멸하며 안정적 수입원이 되는 합법적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불법자금을 합법자금으로 둔갑시키는 '자금세탁' 을 시도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그들의 자금이 모습을 드러내는 짧은 순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데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 무렵부터 이 공동전선에 본격 합류했다. 자금세탁 규제 법률을 갖추고, 자금세탁을 감시하는 원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립 운영하는 등 세계 표준에 상응하는 법률 및 규제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자금세탁 규제법을 가운데 자금세탁 처벌법규(이 처벌법규에 정한 죄를 '자금세탁죄' 로 부르기로 한다)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현행 자금세탁 규제법률을 개관한 다음, 자금세탁 처벌법규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자금세탁' 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출발할 것인가를 필두로 하여, '전제범죄' 및 '세탁행위' 의 개념, 자금세탁죄의 '규정체계'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뤘다. 결론적으로는 세계표준에 합당하게 자금세탁 처벌법규를 정비하도록 제안하였다.

- ❖ 주제어 : 자금세탁,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FATF 상호평가보고서(한국, 2009. 6.)

*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I. 머리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람, 재화 및 정보의 국제적 이동은 급증하고 국가간 경계는 모호하게 변했다. 이것은 러시아 ‘마피아’, 일본 ‘야쿠자’, 중국 ‘삼합회’와 같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에게 새로운 기회이다. 그들은 활동영역을 글로벌 레벨로 확장하고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영역에서 불법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끊임없이 노린다. 또 그들은 종래의 엄격한 상하조직이 아니라 막강한 정보력과 기동력을 갖춘 유연하고도 기능적인 조직으로 변모하며, 마약이나 총기류 같은 전통적 불법거래 품목 이외에 문화재, 수산물, 불법이주자수송, 신용카드·여권위조, 인터넷 사기 등과 같은 다양한 아이템에 손을 뻗고 있다.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집단의 첫 번째 관심사는 돈(자금)이다. 자금은 조직범죄집단을 존속·번성하게 만드는 원천으로서 조직범죄집단의 ‘실체’이다. 그들은 범죄행위 내지 불법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축적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에 진출하는 패턴을 반복한다. 조직범죄집단의 조직원이나 상층부는 바뀌어도 그 실체인 자금은 집단이 존속하는 한 건재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국의 사법기관 종사자들은 조직범죄집단의 조직원을 ‘일망타진’(?)한 뒤에도 상황이 달라지 않았음을 깨닫고 허탈해 한다.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그들의 자금을 색출하고 박탈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조직범죄집단을 근원적으로 해체 또는 고사시킬 수 있는 대응방법이 된다.

조직범죄집단은 법집행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며, 합법적인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자금을 합법자금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 이를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라고 부른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자금세탁이란 “불법적으로 획득한 수익을 합법적인 원천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 동일성 또는 원천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프로세스”¹⁾라고 할 수 있다.

자금세탁은 또 다른 해악 및 범죄의 연결고리가 된다.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은 마약

1) 국제연합 ‘마약 및 범죄 사무국’(UNODC)의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지원에 관한 모범법률안’(Model Legislation on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2005. 10.)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http://www.unodc.org/documents/money-laundering> (last visit 2009. 10. 30.) 참고.

구입, 문화재 밀수, 불법이주자수송 등에 소요되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시도하고, 부패한 공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뇌물, 리베이트, 공공펀드, 심지어는 국제 금융기관에서 들여온 국가개발차관까지 가로채서 합법자금으로 둔갑시킨다. 테러리스트들은 끔찍한 재앙을 초래하게 될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한다. 자본시장 기반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자금세탁을 위한 돈이 수시로 출몰하게 되면 이자율과 환율이 급변하고, 고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등 국가경제를 쪼먹게 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의 불법자금과 자금세탁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들에 의해 이뤄지는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금세탁규제를 위한 최초의 국제법적 대응은 1988년 국제연합의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he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이었다. 그 후 국제연합은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Terrorism, 1999),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부패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005) 등을 속속 제정하였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자금세탁에 관한 금융조치 팀’(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FATF)²⁾에서는 1990년 자금세탁규제를 위한 ‘40개 권고안’(FATF 40 Recommendations)을 발표한 뒤, 자금세탁의 기법·경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1996년과 2003년에 그 수정권고안을 발표하였고, 2001년에는 테러자금에 대응하기 위하여 8개의 특별권고안을 추가하였으며 2004년에는 그 9번째 권고안을 추가하였다.³⁾ 이러한 각종 협약 및 권고안 등이 오늘날 자금세탁규제를 위한 세계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자금세탁규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기구로서 에그몽 그룹(Egmont Group)⁴⁾ 및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 방지 그룹’(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 APG)⁵⁾ 등이 활동하고 있다.

2) 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하여 현재 32개국(OECD국가 25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의 제정,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 및 관련제도 실시 등을 거쳐 2009. 10. 14. 정회원으로 가입 승인되었다.

3) 이를 합쳐 ‘40+9 권고안’이라고 부른다.

4) Egmont Group은 세계각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 FIU) 사이의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5. 6. 설립되었고, 현재 116개국의 FIU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은 2002. 6.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Egmont Group은 회원국 간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 인터넷시스템인 ESW(Egmont Secure Web)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FATF 정회원 가입 승인을 앞두고 발간된 APG ‘상호평가보고서’(Mutual Evaluation Report, 2009. 6.)⁶⁾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범죄 신디케이트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주요한 자금세탁 기법은 현금화 및 타인명의 차명계좌 입금 등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자금세탁을 하기에 대단히 매력적인 국가라고 한다. 이 보고서 내용을 신뢰한다면 우리나라가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의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잠재적 위험이 큰 국가인 만큼, 선제적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권고안과 같은 세계표준에 합당한 자금세탁 규제법률 및 관련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세계표준은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며 국제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중요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자금세탁 규제법규 가운데 핵심에 해당하는 자금세탁행위 처벌법규(이 처벌법규에 정한 죄를 ‘자금세탁죄’로 부르기로 한다)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의 중점은, 위 세계표준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선행연구⁷⁾에서 다소간 간과되었던 기초개념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개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두기로 하겠다.

-
- 5) APG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아·태지역 국가간 협조를 위하여 1998. 3. 설립되었고, 현재 36개국이고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 10.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APG는 FATF 평가방법론에 의거하여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아·태지역 내의 국제기준 이행 및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 6) APG/FATF, Mutual Evaluation Report,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KOREA), 2009. 6.
 - 7) 최근의 주요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석구, 주요국가의 불법자금추적체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금융정보분석원,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2002 ; 김성태,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개인정보보호 :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고객주의의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의 검토”, 법학연구, 제7집(2005),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혜정, “자금세탁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2006), 형사정책연구원 ; 남승오,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 혐의거래보고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2호(2007),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배기연, 자금세탁행위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성낙인·권건보, 자금세탁방지법제론, 경인문화사, 2007 ; 이보영, “자금세탁방지법제에 대한 형법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2009), 한국형사법학회 ; 장준오, 90년대 자금세탁 : 국제적 추세와 국내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전수영, 자금세탁에 관한 한·중·일 형사법적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전수영, 한·중·일 동북아시아 자금세탁에 관한 연구 : 형사법적 대응책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08 ; 전수영, “자금세탁수사에서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중·일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0권 제1호(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탁희성·도중진, 조직범죄관련 자금세탁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4 등.

II. 자금세탁 규제법률과 자금세탁죄

1. 자금세탁 규제법률

우리나라의 주요한 자금세탁 규제법률로서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등이 있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2001. 11. 설립되어,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 FIU)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자금세탁과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 되면 해당자료를 사법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자금세탁규제를 위한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거래법’이라 한다)은 ‘금융실명제’의 근거법률로서 자금세탁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법률에 해당한다. 동법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며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금융기관은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제2조 제1항) 금융기관종사자는 명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고(제3조 제1항), 명의인의 요구·동의 없이는 그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제4조 제1항) 이에 위반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라 한다)

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그 금융재산이 불법재산⁸⁾이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⁹⁾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¹⁰⁾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이런 보고를 받은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등협박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라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 금융거래정보를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수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금융기관은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시 또는 2천만원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고객신원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금융거래의 실제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이외에 실제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의2 제1항).

다. 공중등협박목적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공중등협박목적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¹¹⁾(이하 ‘공중등협박방지법’이

- 8) 동법의 ‘불법재산’이란 ① 범죄수익규제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 ②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수익등, ③ 공중등협박방지법 제2조 제1호의 공중협박자금 등을 말한다(제2조 제3호).
- 9) 동법의 ‘자금세탁행위’란 ①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②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가장)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③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 등)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제2조 제4호).
- 10) 동법의 ‘공중등협박자금 조달행위’란 공중등협박방지법 제6조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5호).
- 11) 국민 일반은 ‘공중 등 협박목적 위한 자금’이라는 용어를 매우 생경하게 느낄 것이다. 동법의 용어정의에 의하면,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소정의 행위(살인·체포감금·약취유인·항공기폭파·선박침몰·기간시설폭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테러자금’이다. 외래어를 범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국민 일반에게 생경한 용어를 새로 만들어

라 한다)은 2008. 12.에 발효된 법률로서 테러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¹²⁾을 이행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그를 금융거래제한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제4조 제1항, 제2항),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제5조 제2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벌하도록 하였다(제6조 제3항). 또 테러자금을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한 행위 또는 이런 행위를 하도록 강요·권유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제6조 제1항). 동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짝을 이루어 테러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세탁을 예방하거나 또는 이에 대응하는 법적 수단이 된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은 동법에 정한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가장·은닉하는 자금세탁행위 등을 처벌하고 범죄수익등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동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짝을 이루어 자금세탁규제에 널리 적용되는 핵심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자금세탁행위의 유형은 ① 범죄수익등¹³⁾의 취득·처분에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인이 익히 그 개념을 알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널리 통용되고 ‘테러’(Terror)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쪽이 낫다고 본다.

- 12) 국제연합의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Terrorism, 1999)을 지칭한다. 위 협약은 당사국에게 테러를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2004. 2. 위 협약을 비준 완료하였다.
- 13) 동법의 ‘범죄수익등’이란 ①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중대범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②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 규정범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①과 ②를 합쳐 ‘범죄수익’이라 한다), ③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한다), ④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혼합된 재산 등이다(제2조 제3호).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제3조 제1항 제1호), ②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동조 동항 제2호), ③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행위(동조 동항 제3호), ④ 그 미수범 및 예비음모행위(동조 제2항, 제3항), ⑤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행위(제4조) 등이다.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제5조). 처벌에 있어서는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 등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었다(제7조).

동법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는 부가형으로서 임의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몰수(형법 제48조, 제49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동법 제8조에 의하면 몰수 대상은 범죄수익(제1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제2호),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등수수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제3호), 이들 두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제4호), 위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제5호) 등이다. 또한 동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추징요건을 완화하였는데, 원래 형법상 추징은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만 가능한 것이나(형법 제48조 제2항), 동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이라 한다)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과 전형적으로 결부되는 마약류범죄의 진압·예방 및 국제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입국과 상륙절차, 처벌 및 몰수, 보전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자금세탁행위는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¹⁴⁾

14) 동법에서 ‘불법수익등’이란 ①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61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

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의 성질·소재·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하거나 가장한 행위(제7조 제1항), ② 그 미수범 및 예비음모행위(제7조 제2항, 제3항), ③ 정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행위(제8조) 등이다.

금융기관이 그 업무에 있어서 수수한 재산이 불법수익등임을 알았을 때 또는 거래상 대방이 자금세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벌한다(제11조). 이와 관련하여 양벌규정도 두었다(제18조).

동법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에서는 필요적 몰수(제1항)를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임의적 몰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제3항). 형법상 추정요건을 완화하여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성질, 사용상태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권리유무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조). 특히, 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 등을 업으로 한 죄의 경우에 추정가액을 산정함에는 그 업으로 한 기간 내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당해기간 내의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또는 법령에 의한 급부의 수렁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금액 재산취득시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제17조). 그 밖에 동법에는 몰수절차의 특례, 제3자 참가신청의 특례, 보전절차, 몰수·추징재판의 집행·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자금세탁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자금세탁행위’라 함은 ① 범죄수익규제

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이를 ‘불법수익’이라 한다), ②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한다), ③ 불법수익 및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 등이다. 적용대상범죄가 다르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범죄수익규제법에서 말하는 ‘범죄수익등’과 구조적으로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②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 행위, ③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 등)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한 행위 등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금세탁행위는,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혐의거래의 한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것이고(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4조 제1항), 자금세탁죄로서 형사처벌되는 행위유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금세탁죄’를 자금세탁행위 처벌법규에 정한 죄라고 부르기로 한다면, ①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에 정한 죄(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행위), ②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가장)에 정한 죄(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물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소재·출처·귀속관계를 은닉하거나 가장한 행위), ③ 범죄수익규제법 제4조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8조에 정한 죄(정을 알면서 범죄수익등(불법수익등)을 수수한 행위) 등이 자금세탁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발견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4조 제1항에서 ‘자금세탁행위’로 열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는 ‘자금세탁죄’로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유형(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가장·은닉)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상론하기로 하겠다.

Ⅲ. 자금세탁죄의 개정방향

가. 기초개념 확립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규제법률은 세계표준을 상당 수준 반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라가 FATF의 평가체계에 따른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 및 관련제도 실사 등을 거쳐 2009. 10. 14. FATF 파리 회의에서 정회원으로 가입 승인되었다는 사실이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세탁은 ‘자금세탁방지법’(가칭)과 같은 체계적 통일성을 갖춘 단행법률이 아니라, 수개의 관련법률로 분산 규제되기 때문에 적잖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자금세탁죄를 비롯하여 자금세탁 규제법률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기초개념을 확립함으로써 출발점을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자금세탁의 개념

자금세탁의 개념은 자금세탁 규제법률 전체를 관류하는 핵심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법자가 자금세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출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입법자는 ‘자금세탁행위’를 입법기술적으로 열거하였는데, 그 가운데 ①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②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가장)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의 경우는 그 자체가 당해조항의 자금세탁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③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은닉·가장의 경우는 그 자체가 당해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자금세탁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포탈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하는 사전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①②의 경우는 은닉·가장하는 재산이 범죄수익등(불법수익등)임을 전제로 하지만 ③의 경우는 범죄수익등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합법수익이라도 그 은닉·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③의 경우는 오늘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금세탁의 개념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우리 입법자는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입법 기술적 열거를 통해서 전혀 다른 뉘앙스를 슬쩍 덧붙인 셈이다. 이 법률의 입법 당시에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생각한다.¹⁵⁾

15) 이렇게 된 것은 당시의 상황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전까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예관한특례법(1995)이 유일한 자금세탁 규제법률이었다. 1997. 7. 자금세탁방지예관한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이 법률안은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도입이나 금융정보 분석원(FIU)의 설립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당시 FATF의 ‘40개 권고안’(1996)으로 대표되는 세계 표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나마 이 법률안은 2000. 5. 국회중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그

오늘날 세계표준에 해당하는 국제연합의 간명한 개념정의에 의하면, 자금세탁이란 “불법적으로 획득한 수익을 합법적인 원천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 동일성 또는 원천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프로세스”이다. 자금세탁에 대한 이런 개념정의로부터 출발하기로 한다.

다. 전제범죄

자금세탁의 대상은 ‘자금’이다. 이를 보통 ‘범죄수익’(Proceeds of Crime)이라고 하는데, 국제연합 ‘조직범죄 방지협약’ 제2조(용어정의)에서는 “범죄실행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취득한 재산”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범죄수익이 어떤 범죄(이를 ‘전제범죄’라 한다)를 통하여 발생·취득한 것이어야 하느냐이다.

범죄수익의 전제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①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및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의 규정에 정한 자금세탁죄의 경우는 전제범죄가 ‘특정범죄’(‘중대범죄’¹⁶⁾ 및 ‘제2조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¹⁷⁾일 것을 요

무렵인 1999. 8. 일본은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조직범죄와 관련하여 자금세탁규제 및 범죄수익박탈에 대한 상세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우리나라 입법가들에게 큰 자극제로 작용했다. 2000. 11. 정부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01. 9.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당시 입법가들은 한편으로는 세계표준(FATF)에 상응하게 입법을 해야 한다는 차원과, 다른 한편으로는 2001. 1.부터 시행될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를 앞두고 국부의 해외유출 및 불법자금의 유출·입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소위 ‘세계표준과 국익의 조화’를 꾀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서둘러 전방에 금융거래 감시체계를 원톱으로 배치하고, 그 원톱 시스템의 감시 대상의 하나로 (당시의)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외국환거래에 따른 거래 등을 이용하여 조세포탈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하는 자금세탁행위’라는 딱 몸뚱이를 덧붙인 것이 현재까지 약간의 자구수정을 거쳐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가 완성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이런 행위를 자금세탁이 아니라 조세포탈이라는 관점에서 규제하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 16) ‘중대범죄’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동법 별표에 규정된 죄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114조 제1항(범죄단체의 조직)의 죄, 제129조(수뢰) 내지 제133조(뇌물공여)의 죄, 제207조(통화위조 등)·제208조(위조통화 취득)·제212조[미수범(제207조 및 제20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13조(예비음모)의 죄, 제214조(유가증권 위조 등) 내지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죄·제223조[미수범(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예비음모(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의 죄, 제225조(공문서위조 등) 내지 제227조의2(허위공문서작성 등)·제228조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제229조[위조등공문서 행사(제228조

제2항을 제외한다]·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등) 내지 제234조(위조사문서 등 행사) 및 제235조 [미수범(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제228조제1항·제229조(제228조제2항을 제외한다)·제231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 및 제247조(도박개장)의 죄, 제250조(살인)·제254조[미수범(제25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55조(예비음모(제250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의 죄, 제314조(업무방해) 및 제315조(경매,입찰방해)의 죄, 323조(권리행사방해) 내지 제324조의5(미수범)·제325조(점유강취 등) 및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의 죄, 제329조(절도) 내지 제331조(특수절도)·제333조(강도) 내지 제340조(해상강도)·제342조[미수범(제331조의2·제332조 및 제341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343조(예비음모)의 죄,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47조(사기), 제351조[상습사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각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의 죄, 제355조[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의 죄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동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의 죄, 제362조(장물취득 등)의 죄, 경륜·경정법 제23조(명령,처분 및 검사)·제24조(유사행위 금지)·제26조(벌칙) 및 제27조(벌칙)의 죄, 관세법 제269조(전자문서 위·변조 등) 및 제271조 제2항[미수범 등(제26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수출입가격 조작)의 죄, 변호사법 제111조(알선수증 등)의 죄,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변조)의 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업으로 한 사행행위 등)의 죄, 상법 제622조(발기인 등의 특별배임) 및 제624조[미수범(제622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상표법 제93조(상표권 등 침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권 등 침해)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등)의 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벌칙) 및 제445조 제42호(업무정지 위반)의 죄, 아동복지법 제40조 제1호(아동매매 등) 및 제42조(미수범)의 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신용카드 위·변조 등)·제2항 제3호(타신용카드가맹점 명의사용) 및 제5항(미수범)의 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성매매권유 등)·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영업 등(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및 제23조[미수범(제18조·제1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게임물이용 사행행위 등)의 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2항(보조금의 반환)의 죄, 직업안정법 제46조(폭행 등에 의한 직업소개 등) 및 제47조 제1호(무허가사업)의 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총기 불법유통 등)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제5조(금융기관임직원의 수재 등) 및 제7조(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제3조(알선수재)·제5조(국고손실)·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4(상습강·절도죄의 가중처벌)·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를 환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의 죄, 과산법 제366조·제368조 및 제370조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상습폭행 등) 내지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제5조 제1항(단체 등의 이용) 및 제6조[미수범(제2조·제3조·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 후단·제340조제2항 후단 및 제343조의 죄를 제외한다) 및 제5조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한국마사회법 제50조(유사행위금지 등)·제51조(경주마에 약물사용 등)·제53조(조교사 등의 재물수수 등)·제54조(조교사 등의 제3자 뇌물공여 등)·제58조(위계에 의한 경마방해 등) 및 제60

구하고(범죄수익규제법 제2조 제1호), ②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가장) 및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의 규정에 정한 자금세탁죄의 경우는 전제범죄가 ‘마약류범죄’¹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61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¹⁹⁾일 것을 요구한다(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2조).

우리 입법자처럼 전제범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합당하지는 의문이다. 전제범죄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을 반영하거나 또는 전제범죄의 추가·삭제를 위하여 거의 매년 전제범죄 목록을 손보아야 한다는 실무적 부담은 차치하더라도(제때 손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식은 자금세탁규제의 목적달성을 상당 부분 좌절시킬 수 있다. 범죄수익이란 거의 모든 범죄유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므로, 전제범죄 목록에 없는 범죄(예컨대 강간죄)의 경우라도 조직범죄집단이 보수를 받고 청부강간을 하는 등 얼마든지 범죄수익과 관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부살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을 처벌하는데 청부강간의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 일반은 이런 ‘법률가들의 사고방식’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가장), 범죄수익규제법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조차 전제범죄 목록에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을 해주고 받은 보수 또는 정을 알면서 수수한 범죄수익등에 대한 자금세탁행위는 - 무리한 해석론에 의하지 않고는 - 자금세

조(미수범)의 죄, 식품위생법 제74조의2[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분을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3조[위해건강기능식품 판매금지(제23조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의 죄.

- 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범죄단체 자금제공)·제6조[미수범(제5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국제상거래에있어서의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재산국의도피),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 등에관한법률 제8조(집단살해죄)부터 제16조(사범방해죄)까지, 공중등협박방지법 제6조 제1항(공중협박자금 모집 등)·제4항(미수범)의 죄.
- 18) ‘마약류범죄’란 마약류불법거래법 제6조(업으로 행한 마약류불법수입 등)·제9조(마약류로서의 물품구입 등) 또는 제10조(선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마약수출입 등) 내지 제61조(마약원료식물재배 등)의 죄.
-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장소 등 제공) 또는 제61조 제1항 제3호[장소 등 제공(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

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 등 어처구니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제6조에서는, 당사국이 최대한 광범위한 전제범죄에 자금세탁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데(제2항 (a)), 모든 중대범죄(장기 4년 이상의 자유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와 동협약 제5조(조직범죄집단에서의 관여행위)· 제8조(부패)· 제23조(사법방해)에 규정된 죄는 반드시 전제범죄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제범죄 목록을 사용하는 당사국의 경우에는 적어도 조직범죄집단과 관련된 범죄만큼은 반드시 그 목록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제2조 (b)).

FATF ‘40개 권고안’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제1 권고를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각국은 일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전제범죄를 지정하든 아니면 전제범죄 목록을 사용하든, 최소한 자국법에 의하여 중죄로 규정된 모든 범죄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을 과할 수 있는 모든 범죄(아니면 단기 6월 이상의 자유형을 과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전제범죄에 포함하되, 조직범죄집단에서의 관여,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 인신매매 및 불법이주자 수송, 성적착취(특히 아동에 대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 총기류 불법거래, 장물 등 불법거래, 부패, 사기, 통화위조, 불법복제, 환경범죄, 살인 및 중상해, 유괴·감금 및 인질행위, 강도 및 절도, 밀수, 강요, 위조, 해적행위, 내부자거래 및 시장조작 등 20개 유형에 대해서는 그 법정형 여하를 떠나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최근 FATF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보고서’(2009. 6.)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제범죄 목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FATF 기준에 상응하게 테러·환경범죄·저작권침해 등을 자금세탁죄의 전제범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²⁰⁾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과 관련하여,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제2조(용어정의)는 ‘조직범죄집단’(Organized Criminal Group)을 “직·간접적으로 금전 기타 물질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장기 4년 이상의 자유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를 범하거나 이 협약에 규정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존속 및 활동하는 3인 이상으로 결성된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적어도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과 관련된 한도에서는, 우리 형법상 장기 4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과할 수 있는 범죄(중대범죄)는 모두 자금세탁죄의 전제범죄로 하는 것이 위 협약 및 권고안의 취지에 부합한다.

20) APG/FATF, Mutual Evaluation Report,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KOREA), 2009. 6., p.40.

이렇게 되면 형법 및 특별법에 정한 대부분의 죄가 전제범죄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광범위하게 자금세탁규제가 가능하게 된다.²¹⁾

라. 세탁행위

자금세탁죄로 처벌대상이 되는 ‘세탁행위’의 개념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입법자는 ①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②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동법 동조 동항 제2호), ③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행위(동법 동조 동항 제3호), ④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소재·출처·귀속관계를 은닉하거나 가장한 행위(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 ⑤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등(불법수익등)을 수수한 행위(범죄수익규제법 제4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자금세탁죄의 객관적 행위태양을 ‘은닉’, ‘가장’ 및 ‘수수’로 묘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문제된다. 우리 대법원은 ‘은닉’을 “범죄수익등의 특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²²⁾라고 정의하고, 범죄수익등인 주식을 타인에게 처분한 것처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두는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한다.²³⁾ 또 ‘가장’이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²⁴⁾으로, 타인 명의로 된 이른바 차명계좌에 범죄수익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이에 포

21) 2000년 당시의 입법가들은 자금세탁범죄의 범정형(5년이하 징역)을 기준으로 장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에서 범죄의 중대성·거액범죄수익의 발생 가능성·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외국의 입법례·국제협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4개 법률에 걸쳐 선정된 36종의 범죄를 특정범죄(전제범죄)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재정경제부·법무부,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2개 법률 주요내용, 2001.9.), 이런 미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22)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4885 판결.

23)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4885 판결.

24) 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도7881 판결.

함된다고 한다.²⁵⁾

위 사안들은 비교적 단순한 것이지만, 오늘날의 자금세탁(특히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이 관여하는 경우)은 대단히 기술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자금세탁은 개념적으로는 3단계로 이뤄지는데, 첫째는 범죄행위 내지 불법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등 금융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단계(Placement), 둘째는 이러한 자금의 불법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반복조작을 하는 단계(Layering), 셋째는 이를 통해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경제체계 안으로 유입시켜 통합하는 단계(Integration)이다.²⁶⁾ 기술적으로는 반복거래·부동산투자·유령회사·국제무역·현금밀수 등 전통적 방법은 물론이고, 인터넷 송금, 인터넷 도박, 카지노, 귀금속거래, 미술품거래, 선물·옵션·워런트·스왑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 프라이빗 बैं킹, 무기명채권·무기명증권·여행자수표와 같은 무기명 유가증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²⁷⁾

자금세탁행위의 다양성 및 그 수법의 진화(?)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자금세탁죄의 행위태양은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불완전한 것이다. ‘은닉’ 및 ‘가장’이라는 행위태양에 내포된 언어적 광범성·다의성은 구체적 사례와 관련된 개념형성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특히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등(불법수익등)을 수수한 행위’라는 묘사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당해자금이 범죄수익등(불법수익등)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령한 경우만 치칭할 뿐, 수령 당시에는 그 정을 알지 못하였으나 후에 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금세탁죄의 객관적 행위태양을 정교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제6조 제1항이 그 표준적인 개념을 제공하는데, ① 당해 재산이 범죄수

25)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26) 탁희성·도중진, 조직범죄 관련 자금세탁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41쪽.

27) 오늘날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의 자금세탁은 글로벌 레벨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들이 애용하는 ‘자금세탁의 천국’이며,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이런 ‘더러운 돈’(Dirty Money)을 내심 탐내기도 하는 등 정치적 배경까지 개입할 여지가 있다. <http://www.unodc.org/documents/money-laundering/introduction.html> (last visit 2009. 10. 30.) 참조.

익인 정을 알면서, 그 재산의 불법적 출처를 은닉하거나 가장할 목적으로 또는 전제범죄에 관여한 자의 법적책임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전환 또는 양도한 행위, ② 당해 재산이 범죄수익인 정을 알면서 그 재산의 진실한 속성·원천·위치·처분·이동 또는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은닉 또는 가장한 행위, ③ 당해 재산이 범죄수익인 정을 알면서 그 재산을 취득, 소지 또는 사용한 행위, ④ 위 경우들의 각 범죄행위에 가담, 교류, 공모, 실행착수, 방조, 교사, 촉진 및 상당한 행위 등이다.²⁸⁾ 최근 FATF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보고서’(2009. 6.)에서도 자금세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비엔나 협약 및 팔레르모 협약에 상응하게 자금세탁죄의 행위태양을 상세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²⁹⁾

둘째, 우리 입법자는 전제범죄를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범한 죄’(목적범)로 제한하거나 자금세탁죄 자체의 구성요건을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으로 범한 죄’(목적범)로 제한함으로써 검사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 문제된다. 이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추세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FATF 회원국들은 범죄 구성요건에 객관요소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거나 추정규정을 두는 등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 방지협약’(1988) 제2조 제3항, 국제연합의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2000) 제6조 제2항(f), FATF의 ‘40개 권고안’(2003) 제2조 등에서는 자금세탁죄의 내심요소는 객관적 사실 정황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는 취지를 거듭하여 확인하고 있다.³⁰⁾

28) 위와 같이 정교한 행위태양의 묘사는 국제연합의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 방지협약’(1988)에서 일용 완성된 후, FATF ‘40개 권고안’(1990), 유럽 23개국의 다자조약인 ‘범죄수익의 세탁·수색·압류 및 몰수에 관한 1990년 유럽이사회협약’, 국제연합의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2000) 등으로 이어지면서 세계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9) APG/FATF, Mutual Evaluation Report,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KOREA), 2009. 6., p.34.

30) 국제연합의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 방지협약’(1988)(소위 비엔나 협약) 제2조 제3항에서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인식, 고의 또는 목적은 객관적 정황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고 하였고, 국제연합의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2000)(소위 팔레르모 협약) 제6조 제2항(f)에서도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인식, 고의 또는 목적은 객관적인 사실정황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FATF의 ‘40개 권고안’(2003) 제2조에서도 “자금세탁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고의 또는 인식은 - 이러한 심리적 정황을 객관적인 사실정황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는 발상을 포함하여 - 비엔나 협약 및 팔레르모 협약에 규정된 기준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대법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등이라는 정’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할 것”³¹⁾이라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질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의 입법목적(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³²⁾라고 하고 있다.

자금세탁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추정규정 또는 입증책임전환규정을 둘지 여부는 형사법 일반원칙에 비추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미국, 독일 및 일본의 경우도 이런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 대법원과 같이 해당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하회를 지켜보는 것이 무난하다. 다만, 전제범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은 세계표준에 상응하지 아니하므로 개정을 요한다고 본다.

마. 자금세탁죄의 규정체계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1995)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자금세탁 처벌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의 ‘국제적인 협력하에 규제약물에 관계되는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마약특례법’이라 한다)과 흡사한 형태의 처벌규정이었다.³³⁾ 그 후 본격적인 자금세탁 규제법률로서 제정된 범죄수익규제법(2001)의 자금세탁 처벌규정 역시 당시 일본의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1999)(이하 ‘일본조직범

31) 대법원 2007.2.9. 선고 2005도2709 판결.

32)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5288 판결.

33) 일본마약특례법 제6조(약물범죄수익등의 은닉), 제7조(약물범죄수익등 수수) 등.

죄규제법'이라 한다)의 해당조항을 거의 그대로 계수한 것이었다.³⁴⁾

당시 입법가들은 기존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을 남겨둔 채 일본조직범죄규제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범죄수익규제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자금세탁죄의 규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은 그 범명칭만 놓고 본다면, 모든 종류의 자금세탁죄를 망라적으로 규정한 법률 같지만, 실은 마약류범죄를 전제범죄로 하는 자금세탁죄의 경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 남아 있으므로 두 법률은 엄연히 병렬관계에 있는 셈인데, 범죄수익규제법의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등'과 대응하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의 '불법수익' 및 '불법수익등'의 복잡한 용어사용, 광역법에 해당하는 범죄수익규제법이 협역법에 해당하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의 몰수·추징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어색한 준용체계, 범죄수익규제법에서는 전제범죄가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서는 자금세탁죄가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각 자금세탁죄의 객관적 행위태양이 부분적으로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것 등, 두 법률 사이에 엇박자와 비체계성이 적잖게 노정되고 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의 해당조항을 범죄수익규제법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든지, 아니면 차제에 '자금세탁방지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정비할 것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IV. 맺음말

세계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의 가공할 위협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 그들의 본질은 '조직'이 아니라 '자금'이며, 그들을 근원적으로 해체 내지 고사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자금을 색출하고 박탈하는 것이다. 그들은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증거를 인멸하며 안정적 수입원이 되는 합법적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불법자금을 합법자금으로 둔갑시키는 '자금세탁'을 시도한다. 합법과 불법

34) 일본조직범죄규제법 제2조 제2항('범죄수익'의 정의)·제3항('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의 정의)·제4항('범죄수익등'의 정의), 제10조(범죄수익등의 은닉), 제11조(범죄수익등 수수), 제13조(범죄수익등의 몰수) 등.

의 경계선에서 그들의 자금이 모습을 드러내는 짧은 순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금세탁 수법은 날이 갈수록 세계화·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데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1988년 국제연합의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 방지협약’이 그 첫 포문을 연 이래, 국제연합의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1999),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2000), ‘부패 방지협약’(2005) 등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자금세탁에 관한 금융조치 팀’(FATF)의 ‘40개 권고안’(1990, 1996, 2003)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도 2000년 무렵부터 이 공동전선에 본격 합류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범죄수익규제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등 자금세탁 규제법률을 갖추고, 자금세탁을 감시하는 원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립 운영하는 등 세계표준에 상응하는 법률 및 규제 시스템을 갖추가고 있다. 그 결과 최근 2009. 10. 14. 자금세탁규제의 선봉장에 해당하는 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 승인되었다. 그러나 미진한 점이 남아 있다. FATF ‘상호평가보고서’(2009.6.)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더 주목해야 것은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및 3개의 부속의정서(인신매매, 불법이주자수송, 총기류불법거래)에 대하여 2001년 10월 무렵 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년여가 지난 2009년 10월 현재까지 관련법률 등을 정비하지 못해 비준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관심배경 속에서 본고는 우리나라 자금세탁 규제법률 가운데 자금세탁 처벌법규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금융실명제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범죄수익규제법·마약류불법거래규제법·공중등협박방지법 등 자금세탁 규제법률을 개관한 다음, 자금세탁 처벌법규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자금세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출발할 것인가를 필두로 하여, ‘전제범죄’ 및 ‘세탁행위’의 개념, 자금세탁죄의 ‘규정체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다뤘다. 결론적으로는 세계표준에 합당하게 해당법률의 자금세탁 처벌법규를 정비하도록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강석구, 주요국가의 불법자금추적체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김용정보분석원,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2002.
- 김성태,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개인정보보호 :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고객 주의의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의 검토”, 법학연구, 제7집(2005),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혜정, “자금세탁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2006), 형사정책연구원.
- 남승오,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 혐의거래보고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2호(2007),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배기연, 자금세탁행위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성낙인·권건보, 자금세탁방지법제론, 경인문화사, 2007.
- 이보영, “자금세탁방지법제에 대한 형법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2009), 한국형사법학회.
- 장준오, 90년대 자금세탁 : 국제적 추세와 국내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재정경제부·법무부,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2개 법률 주요내용, 2001.9.
- 전수영, 자금세탁에 관한 한·중·일 형사법적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전수영, 한·중·일 동북아시아 자금세탁에 관한 연구 : 형사법적 대응책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08.
- 전수영, “자금세탁수사에서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중·일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0권 제1호(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탁희성·도중진, 조직범죄관련 자금세탁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4.
- APG/FATF, Mutual Evaluation Report,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KOREA), 2009. 6.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FATF), 40 Recommendations, 1990·1996·2001·2003·2004.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005.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he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 1988.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Terrorism, 1999.

United Nations UNODC, Model Legislation on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2005. 10.

* 참고한 웹사이트

<http://www.apgml.org> (last visit 2009. 10. 30.).

<http://www.egmontgroup.org> (last visit 2009. 10. 30.).

<http://www.fatf-gafi.org> (last visit 2009. 10. 30.).

<http://www.unodc.org/documents/money-laundering> (last visit 2009. 10. 30.).

A Proposal to the Reform of the Statutes related with the Criminalisation of Money Laundering in Korea : in relation to th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inal Groups

Kim, Yong-Uk*

In recent years the advance in globalization could provide a new opportunity to th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inal groups. Their true essence is 'Money'.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disorganize or wither them up is to deprive them of 'Money'. For the purpose of getting away from the pursuit of the judiciary authorities or of destroying the proofs of the offenses, or of investing to the lawful business, they used to attempt 'Money Laundering'.

Tod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ild up an united front to combat against money laundering, committed by th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inal groups. Korea has joined to the united force by 2000. Recently Korea is fully furnished with the legal system and the related institutional measures.

In this Paper I take a general outlook on the legal regulation to money laundering in Korea, and find some faults in the statutes related with the criminalisation of money laundering. As the conclusion I present the ideas for the reform of the statutes, to be consistent with Vienna and Palermo Conventions.

❖ Key words : Money Launder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inal Groups, United State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FATF Mutual Evaluation Report(KOREA, 2009. 6.)

투고일 : 2009. 10. 21 / 심사(수정)일 : 2009. 11. 8 / 게재확정일 : 2009. 11. 26

* Professor, College of Law, PaiChai University